



# 스포츠혁신위원회 권고문 분석을 통한 한국사회 스포츠패러다임의 방향 설정과 과제

## Establishing New Sports Paradigm and Future Task through the Sports Reform Committee Policy Documents Analysis in South Korea

홍덕기\* 경상대학교 조교수  
Hong, Deockki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 요약

2019년 초 벌어진 스포츠 미투 운동(#MeToo)은 기존의 엘리트 스포츠 중심 패러다임의 한계를 드러냈으며, 이를 계기로 정부-민간 합동으로 '스포츠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가 설립되었다. 혁신위는 한국사회의 스포츠 정책을 진단하고 변화하는 한국사회에 맞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기 위해 스포츠, 인권, 여성, 장애인, 법조인, 시민사회 등을 대표하는 15명의 민간위원과 5명의 정부 부처 차관들로 구성되어 지난 일 년 간 활동한 스포츠 정책 총괄기구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혁신위가 발표한 7개 권고문의 배경, 핵심내용, 의미를 탐색하며, 이행점검 상황과 향후 과제를 살펴보는 데 있다. 혁신위는 2019년 상반기 총 73차례의 회의를 통해 7개의 권고문을 발표하였고, 하반기에는 총 23차례의 회의를 통해 권고에 따른 52개 세부과제에 대한 이행상황을 점검하였다. 본 연구는 첫째, '스포츠혁신을 향한 여정'(2장)에서 각각의 권고문이 발표된 배경과 핵심내용, 의미를 탐색한다. 둘째, '스포츠혁신과 변화'(3장)에서 52개 세부이행과제의 이행상황에 대해 알아본다. 셋째, '스포츠패러다임의 방향 설정과 과제'(4장)에서는 혁신위 권고문 분석을 바탕으로 한국사회 스포츠패러다임의 방향을 설정하고 향후 과제를 제시한다.

주요어: 스포츠혁신위원회, 스포츠 패러다임, 스포츠 인권, 모두를 위한 스포츠

### Abstract

Recent #MeToo movements revealed serious cases of sexual violences in sports in South Korea. South Korean sports system has remained excessively competitive culture based on nationalism and elite sports paradigm. As a response to the human rights violations in sports of the country, an 1-year governmental committee with 20 members (Sports Reform Committee: SRC) was established including five Deputy-Ministers and 15 experts from academy and civil society. Reviewing the limitations of existing national sports policies and practices, the SRC has published a series of seven policy documents in a format of "Recommendations" to achieve "sports for all" paradigm.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background and essential contents in the seven recommendation documents and monitor its feasibilities.

Key words: Sport reform committee, Sports paradigm, Human rights in sports, Sports for all

\* deockkihong@gnu.ac.kr

## 서론

“피해자로서 저의 존재를 그동안 부정해왔어요 말하지 않으면 없었던 일이 될 거라고 믿고 싶었던 거죠 하지만 벼랑 끝에 선 심정이었어요 숨고 숨다가 결국 벼랑 끝까지 몰려서 떨어져 죽게 생긴... 말하지 않고 혼자 품고 죽는다면 후회하지 않을까, 많이 생각했어요 결국, 살려달라고 소리친 거예요 (심OO 선수의 인터뷰, 경향신문, 2019.12.30).”

2019년 1월 초 국민에게 충격과 경악을 준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 심OO 선수가 일 년 만에 입을 열었다. 고소장에 따르면 심 선수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3년 넘게 조OO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로부터 대학교 빙상장과 태릉 및 진천선수촌의 지도자 라커룸 등에서 성폭행을 당했다. 이 사건이 알려진 후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를 통해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처벌’, ‘엘리트 체육 전면 재검토’,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체육계 스스로 쇄신책 제시’ 등 4가지를 주문했다(위클리오늘, 2019.1.14).

사실, 국내 스포츠 분야의 인권침해 실태는 최근에 발생한 문제가 아니다. 지난 권위주의 정부시기부터 이어져 온 국가주의와 승리지상주의 스포츠패러다임은 올림픽 금메달 등 대회 성적 향상과 국위선양 등을 명분으로 반세기가 가깝도록 지속 되었다. 2000년 “공부와 운동을 병행하고 싶다.”며 태릉선수촌 입소를 거부했던 장희진 선수 파동과 2003년 수십 명의 사상자를 냈던 천안초등학교 축구부 합숙소 화재사건, 그리고 체육특기자제도의 병폐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던 정유라 사건 등은 학교 스포츠 현장에서의 인권침해와 각종 비리 실태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이다(안민석, 홍덕기, 2019).

스포츠 분야의 인권침해에 대한 사회적 심각성은 연구를 통해서도 드러난다. 2000년대 초반의 연구들은 주로 학교운동부에 소속된 학생선수의 학습권 문제에 초점을 두고 수행되었다(류태호, 2003, 2005; 류태호, 이주욱, 2004; 이학준, 2003). 이는 이른바 ‘공부하는 학생선수’로 대표되는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이 기본권으로서 우선되어야 한다는 관점이 확고했기 때문

이다(임수원, 2011). 학습권 보장에 대한 학문적 논의는 학생선수의 최저학력제(명왕성, 조성원, 2016)와 중도탈락 학생선수에 대한 학문적 논의(이정래, 2003; 임용석, 김준성, 한만석, 2014)로 이어졌다. 한편, 학생선수의 학습권 이외에 폭력 및 성폭력 문제도 연구되기 시작했다(김성하, 전원재, 임수연, 2015; 이선희,곽정현, 2019; 주종미, 2008; 허현미, 2011). 이들 연구결과는 학교운동부 생활과 문화에 학습권 침해, 폭력 및 성폭력이 만연해 있으며 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구조적, 제도적 차원의 인권문제임을 말해준다(홍덕기, 류태호, 2007).

국가인권위원회는 학생선수의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스포츠 분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권고하였고(국가인권위원회, 2008, 2009), 국회와 언론에서도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하지만, 여러 사회적 관심과 연구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대책들로 구조적, 제도적 차원의 변화를 이루어내기에는 한계를 보였다. 결국, 2019년 초부터 촉발된 스포츠 미투(#MeToo) 운동은 그동안의 스포츠 인권 분야 개선책들이 실효적이지 않았음을 보여주었다(문화체육관광부, 2019).

스포츠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는 한국사회 스포츠 분야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스포츠패러다임의 변화를 위해 2019년 2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일 년 동안 활동하며 7개의 권고문을 발표한 정부-민간 합동의 범정부적 거버넌스이다. 혁신위는 스포츠, 인권, 여성, 장애인, 법조인, 시민사회 등을 대표하는 15명의 민간위원과 5개 정부 부처(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 국가인권위원회) 차관들로 구성되었다. 그동안 스포츠 정책은 국내 다른 분야와 비교해 국정과제의 우선순위에서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받아온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5개 부처가 범정부적으로 스포츠 분야 정책개발에 일 년간 집중적으로 참여한 것은 대통령의 의지와 국민 여론이 반영된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혁신위에서 발표한 권고문은 국가의 스포츠 정책을 총괄하고 새로운 스포츠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한편, 7차례에 걸친 권고문 전체는 300페이지 남짓으로 그 분량이 방대하고, 각 권고문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

어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또한, 권고에 따른 실제 이행상황을 상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각 권고문이 작성된 배경을 탐색하고 권고의 핵심내용을 상세히 분석하며 그 의미를 살피고 이행현황을 파악하는 작업은 향후 국가 스포츠 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이해하고 이를 현장에 반영하는 과정을 살펴보는 데 있어서 학문적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스포츠 미투(#MeToo) 운동을 계기로 2019년 2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일 년 동안 활동한 혁신위의 권고 배경과 핵심 내용을 분석하고 그 의미를 탐색하여 새로운 스포츠파러다임을 위한 과제를 제시하는 데 있다. 분석 대상은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혁신위원회에서 일 년간 진행한 분과회의, 점검단회의, 전원위원회 회의록 및 참고자료이다. 수집된 자료는 총 96회(분과회의 53회, 점검단회의 17회, 전원위원회 회의 21회)에 걸친 회의록 결과 자료와 각 분과회의 안건에 따른 참고자료이다. 혁신위 활동의 특성상, 자료의 대부분은 활동당시 대외비 문건이었으나 현재는 혁신위 활동이 끝난 상황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올해 상반기 중 스포츠혁신위원회 활동백서를 통해 회의결과 및 활동내용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문화체육관광부, 2020). 연구자는 스포츠혁신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회의에 참석하며 자료를 수집할 수 있었다.

자료 분석은 크게 세 단계로 진행되었다. 첫째, 전원위원회 회의록은 상반기(15회)와 하반기(6회)로 구분하여 날짜순으로 정리하였으며, 연구자가 회의에 참석하며 따로 정리한 노트를 회의결과 자료와 비교하며 주된 내용을 분석 및 정리하였다. 정리의 범주는 회의안건, 주요 논의 결과, 동의사항, 쟁점사항, 각 부처 입장, 현장 이해당사자 입장, 권고의 논리적 연결고리 등으로 구성되었다. 둘째, 각 분과회의 결과자료(1분과 15회, 2분과 16회, 3분과 27회)를 정리하고 주된 내용을 분석하였으며, 연구자가 참석했던 분과회의의 경우는 연구자가 따로 정리한 노트를 회의결과 자료와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의 범주는 주요 권고사항, 권고 동의사항, 권고 쟁점, 논리적 근거 등으로 구성되었다. 셋째, 각 점검단 회의 결과자료(1점검단

8회, 2점검단 9회)를 정리하고 주된 내용을 분석하였으며, 연구자가 참석했던 점검단 회의의 경우는 연구자가 따로 정리한 노트를 회의결과 자료와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의 범주는 정상추진과제, 시행예정과제, 지연추진과제, 각 부처 입장, 현장 이해당사자 입장, 기타 추진 시 고려사항 등으로 구성되었다. 회의결과 자료만으로 분석이 어려운 부분은 각 분과회의 및 점검단 회의에 활용된 참고자료를 찾아 읽어보고 비교하여 교차 분석하는 방식을 택했다. 또한, 자료 분석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분석된 자료를 체육전공 박사학위를 소지한 혁신위 위원 2명을 선정하여 검토하는 과정을 거쳤다.

연구결과, 첫째, ‘스포츠혁신을 향한 여정’(2장)에서는 2019년 상반기 활동한 혁신위 산하 분과위원회(3개)와 전원위원회 회의를 통해 발표한 7개의 권고문을 권고 배경, 핵심내용, 권고가 갖는 의미의 측면에서 살펴본다. 둘째, ‘스포츠혁신과 변화’(3장)에서는 2019년 하반기 활동한 혁신위 산하 점검단(2개)과 전원위원회 회의를 통해 52개 세부이행과제의 이행상황 점검 및 진행 정도에 대해 알아본다. 셋째, ‘스포츠패러다임의 방향설정과 과제’(4장)에서는 한국사회 스포츠파러다임 변화를 위한 향후 과제를 제시하였다.

## 스포츠혁신을 향한 여정

혁신위는 2019년 상반기에 권고문을 발표하고, 하반기에 권고문에 대한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일정으로 활동하였다. 스포츠혁신을 향한 여정의 첫 번째로 1절에서는 혁신위의 구성과 운영방식을 소개한다. 다음으로 권고문이 탄생하게 된 사회문화적 배경과 각 권고문의 핵심내용, 그리고 권고문이 갖는 의미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2절에서는 ‘스포츠와 인권(1차 권고)’, 3절에서는 ‘학교 스포츠 정상화(2차 권고)’, 4절에서는 ‘생활스포츠 활성화(3-5차 권고)’, 5절에서는 ‘엘리트 스포츠 개선(6-7차 권고)’에 대해 분석한다.

### 1. 스포츠혁신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혁신위는 총 2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9년 2월 11일 열린 1차 전원위원회 회의에서 민간 위원들의 호선으로 문경란 위원장을 선출하였다. 위원회는 총 7개의 권고문 발표를 위해 상반기 동안 총 3개의 분과로 나누어 활동하였으며 분과별 명단은 <표 1>과 같다(문화체육관광부, 2020).

표 1. 혁신위 분과별 명단

이름	분과	소속 및 경력
문경란	전체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위원장
서현수		서울대학교 박사 후 연구원/ 1분과 위원장
서정화	1	올림픽 3회 출전 모글스키 국가대표 선수
배복주		성폭력상담소협의회 상임대표
정용철		서강대학교 교수/ 2분과 위원장
류태호		고려대학교 교수/ 전 체육시민연대 대표
이용수	2	세종대학교 교수/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위원장
이대택		국민대학교 교수/ 전 스포츠문화연구소장
함은주		문화연대 집행위원/ 전 하키 선수
홍덕기		경상대학교 교수/ 3분과 위원장
이용식		카톨릭관동대학교 교수/전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연구원
정윤수		성공회대학교 교수/ 스포츠평론가
원민경	3	법무법인 원 변호사
이영표		SBS 해설위원/ 전 축구 국가대표 선수
김화복		중원대학교 교수/ 전 배구 국가대표 선수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
박백범	당 연 직	교육부 차관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김희경		여성가족부 차관
정문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표 2. 혁신위 권고문 제목 및 발표 시기

차	권고문 제목(발표일)
1	스포츠 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체계 확립과 정부 및 체육계 인권침해 대응 시스템의 전면 혁신 권고('19. 5. 7)
2	학교스포츠 정상화를 위한 선수육성시스템 혁신 및 일반학생의 스포츠 참여 활성화 권고('19. 6. 4)
3	‘모두를 위한 스포츠(Sports for All)’: 스포츠 인권 증진 및 모든 사람의 스포츠·신체활동 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 권고('19. 6. 24)
4	모든 사람의 ‘스포츠권’을 보장하기 위한 ‘스포츠기본법’ 제정 권고('19. 6. 24)
5	‘일상에서 일생동안’ 스포츠 복지사회 실현을 위한 스포츠클럽 활성화 권고('19. 7. 17)
6	엘리트스포츠 시스템 개선 및 선수육성체계 선진화 권고('19. 8. 22)
7	체육단체 선진화를 위한 구조 개편 권고('19. 8. 22)

1분과는 ‘스포츠 인권’ 분과로 총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1, 3, 4차 권고문을 작성하였다. 2분과는 ‘학교스포츠 정상화’ 분과로 총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2차 권고문을 작성하였다. 3분과는 ‘엘리트스포츠 선진화’ 분과로 총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6, 7차 권고문을 작성하였다. 한편, 5차 권고문(스포츠클럽 활성화)의 경우에는 소속 분과와 관계 없이 전문성을 갖춘 위원들을 중심으로 TF 팀을 구성하여 활동하였다(문화체육관광부, 2020).

혁신위는 상반기 동안 총 58차례 분과회의(1분과 15회, 2분과 16회, 3분과 27회)를 진행하였으며 1회당 평균 3시간 정도 회의했다. 분과회의의 결과는 2주 간격으로 개최된 전원위원회 회의(상반기 총 15회)에서 공유하고 안건을 심의 및 의결하였다. 전원위원회 회의에는 5개 부처 차관 혹은 체육담당 실무국·과장이 참석하였으며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과 체육국장의 경우에는 모든 전원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였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혁신위 운영 및 회의를 보조하기 위해 체육정책과와 체육진흥과 스포츠 정책 및 체육 단체 담당 사무관들을 중심으로 실무 TF팀을 구성하였다(문화체육관광부, 2020). 각 권고문의 제목과 발표 시기는 <표 2>와 같으며, 권고문 작성을 위해 현

장방문 및 이해 당사자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쳤다(표 3 참고).

표 3. 혁신위 현장방문 및 의견수렴 내용

차수	일시	내용
1	4.4	운동 경력단절 사례자 의견수렴
2	4.10	스포츠 인권침해 관련 전문 체육인 간담회
3	4.12	국가대표 코치 의견수렴
4	4.16	장애인체육 전문가 의견수렴
5	4.17	시도 교육청 학교체육 장학사 간담회
6	4.24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방문
7	4.24	오산 스포츠클럽 방문
8	4.26	미국 NCAA 관계자 면담
9	4.26	캐나다 Sandra Kirby 교수 간담회
10	5.1	학부모 간담회
11	5.8	경기단체 간담회
12	5.10	국가대표 지도자협의회 지도자 간담회
13	5.16	대한체육회 관계자 1차 의견수렴
14	5.23	스포츠기본법 제정 토론회
15	5.30	대한체육회 관계자 2차 의견수렴
16	7.10	대한체육회 관계자 3차 의견수렴

## 2. 스포츠와 인권(1차 권고)

### 1) 권고배경

1차 권고는 1분과에서 주도해서 작성하였으며 제일 먼저 권고를 발표하게 된 배경은 스포츠에서 인권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문화체육관광부, 2020). 해외 선진국의 경우 인권, 평등, 다양성이 존중받는 스포츠 환경 속에서 학교 스포츠와 생활 스포츠가 균형적인 발전을 이루어왔다. 하지만 국내 스포츠 현장에서는 그동안 언론에 드러난 기사만 보더라도 행복추구권 등 헌법적 기본권과 다양성 등이 위면당해왔음을 알 수 있다(안민석, 홍덕기, 2019).

이러한 이유는 '1970년대 권위주의 정부시기에 구축된 국가주의적 엘리트스포츠 정책 및 제도의 고착화로 인한 신체 폭력, 성폭력, 학습권 침해 등 인권침해와 차별이 일상화된 구조적 문제(문화체육관광부,

2019)'에서 비롯된다. 2000년대 이후 발생한 스포츠 분야의 인권침해는 셀 수 없이 많으며 최근 벌어진 전남 고등학교 축구부 감독의 학부모 성폭행 사건은 큰 충격을 주었다. 기존의 대한체육회 클린스포츠 센터와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 비리 신고센터, 국가인권위, 교육부, 여성가족부의 관련 부서로는 이러한 스포츠 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 결국, 구조적 문제의 책임은 국가에 있으며 스포츠 분야에서 행해져 온 중대하고 반복적인 인권침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국가의 책무를 준엄하게 환기하려는 것이 권고 배경이다(문화체육관광부, 2019). 따라서, 스포츠와 인권에 대한 전문성과 신뢰성을 갖추면서 기존의 체육 단체와는 별도의 독립된 조직의 신설이 요구된다.

### 2) 핵심내용

1차 권고의 핵심내용은 독립성, 전문성, 신뢰성을 갖춘 스포츠 인권기관인 스포츠 윤리센터(가칭)의 신설이다(문화체육관광부, 2019). 스포츠윤리센터의 역할로는 우선, '스포츠 성폭력 등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가해자에 대한 단호한 조치(징계요구, 수사 의뢰 등), 스포츠 성폭력 등 예방을 위한 외부 모니터링 체계 구축, 정확한 실태 파악과 정책 대안 제시를 위한 정례적 연구 및 조사, 스포츠 관련 젠더 및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제도화, 웹사이트 등을 활용한 온라인 플랫폼 설치 및 운영, 국가 스포츠파러다임의 혁신을 위한 중장기적 정책 및 제도개혁 방안 제시, 국내외 유관 기관 및 단체, 전문가들과의 협력(문화체육관광부, 2019)' 등을 수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 3) 권고의미

1차 권고의 주요의미는 첫째, 대한민국 정부가 시민들의 삶과 문화에 큰 영향을 미치는 스포츠의 고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국가(특히, 대한체육회,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국가인권위원회)에 분명히 하고 있다는 점이다. 혁신위 회의과정에서 체육 단체의 '제 식구 감싸기'와 '숨방망이 처벌'이 현실로 드러났으며 기존의 대책은 실효성이 없음이 확인되었다. 또

한, 성폭력 피해자들은 대한체육회나 회원중목단체들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상담 또는 신고를 하더라도 실효성이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사건을 은폐 및 축소하고 가해자의 입장을 두둔하며 합의를 요구하거나 선수 생활의 불이익 등을 협박하는 사례도 존재했다(문화체육관광부, 2020). 결국, 혁신위는 관리 감독 권한과 책임이 있는 국가가 이러한 사태에 대해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를 따져 묻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둘째, 기존의 대책이 실효성이 없었다는 측면에서 그동안 구조적으로 인권침해를 양산해온 문제를 개혁하기 위한 범정부적 차원의 혁신 전략과 의지를 촉구했다는 점이다. 혁신위의 1차 권고는 ‘올림픽 메달을 위해서라면 선수의 인권은 언제나 유보되거나 희생될 수 있는가’(문화체육관광부, 2019)’라는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스포츠 미투 운동은 국내 스포츠의 구조적 문제를 여실히 드러냈다. 스포츠 성폭력과 같은 사례는 외부로부터 차단된 ‘섬’ 문화 속에서 절대적 권력을 행사하는 가해자로부터 벌어지며 사건 발생 후 묵인, 방조, 공조하는 체육계 내부의 ‘침묵의 카르텔’을 고려할 때 더 이상의 피해자가 양산되는 것을 국가가 나서서 제도적으로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문화체육관광부, 2020). 해외의 경우 2018년 미국 체조국가대표팀 주치의 래리 나사르가 30년간 150명의 여자선수를 상습적으로 성추행, 성폭행한 사건에 징역 175년을 구형한 이유를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 3. 학교스포츠 정상화(2차 권고)

#### 1) 권고배경

2차 권고인 학교스포츠 정상화는 2분과에서 작성했다. 혁신위는 스포츠 미투 운동의 가해자 중 다수가 학교운동부 지도자이고, 피해자 다수가 사건 당시 학생선수이며 피해 장소로 학교운동부 숙소 또는 훈련장인 경우가 많다는 점에 주목했다. 스포츠와 인권에 이어 두 번째로 학교스포츠 정상화를 권고하게 된 배경은 스포츠 인권침해의 구조적 원인이 ‘학교스포츠의 비정상’(문화체육관광부, 2019)’에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비정상의 핵심은 ‘1%의 학생선수들은 운동과잉과 학습결핍을 경험하고 있으며 반대로 99%의 일반 학생들은 학습과잉과 운동결핍을 겪고 있음(문화체육관광부, 2019)’에 있다. 학교스포츠는 본질적으로 ‘교육’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수십 년 동안 교육적 의미를 상실해왔다. 비정상성의 구조적 원인은 ‘국가주의 스포츠패러다임’과 ‘엘리트 선수 육성 시스템’의 문제에서 찾을 수 있다. 특히, 1972년에 도입된 체육특기자제도는 국가대표 선수촌 및 국제대회 메달리스트에 대한 병역특례 및 연금제도 등과 함께 ‘국가주의 스포츠패러다임과 엘리트 스포츠 정책을 떠받치는 제도적 근간(문화체육관광부, 2019)’으로 작동했다. 따라서 근시안적인 대책을 넘어 학생과 선수의 벽을 허물고 학교스포츠 시스템 전반의 정상화를 위한 노력이 요청된다.

#### 2) 핵심내용

2차 권고의 핵심내용은 크게 6가지이다. 첫째,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둘째, ‘체육특기자 진학제도 개편’, 셋째, ‘학교운동부 운영규정 개선’, 넷째, ‘학교운동부 지도자 처우개선’, 다섯째, ‘일반 학생의 스포츠참여 활성화’, 여섯째, ‘전국소년체육대회와 전국체육대회 개편’이다(문화체육관광부, 2019). 이에 대한 구체적 권고사항은 <표 4>와 같다.

2차 권고는 총 35개의 세부과제로 이루어져 있으며 다른 권고와 비교해 권고의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다. 권고의 대상도 교육부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시·도 교육감, 대한체육회장,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회장, 학교체육진흥회 회장, 대한체육회 산하 회원중목단체장, 시·도 체육회장 등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 2020). 이는 스포츠 분야의 비리, 불공정, 반인권, 비민주적 행태의 뿌리가 학교스포츠의 비정상성에 있으며 여러 이해관계 주체가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이다.

첫째, 학습권은 ‘학생선수가 비판적 사고력을 키우고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기본권(문화체육관광부, 2019)’이다. 특히, 다양한 직업선택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 학습권은 필수적이다. 학습권 보장의

표 4. 혁신위 2차 권고 상세내용

분야	내용
1 학생선수 학습권	학기 중 주중대회 참가 금지
	최저학력에 도달 학생만 대회 참가
	학교단위 학생선수 교육 및 훈련계획 수립
	경력전환 학생선수 학습지원 프로그램마련
	국가대표 학생선수 공부지원방안 마련
	학기 중 주중대회를 주말대회로 전환
2 체육특기자진학	학기 중 주말대회 전환에 따른 재정지원
	최저학력 기준 미달 체육특기자 선발 제외
	고입전형 시 종합적 선발기준 반영
	고입전형 시 내신 성적의 실질반영
	체육특기자 진학 가이드라인 설정
	대입전형 시 경기력 외 종합적 요소 반영
3 학교운동부운영 관리	대입전형 종목별 경기력 객관적 지표 개발
	정규수업 후 훈련 실시 및 휴식 규정마련
	주말대회 참여시 참여일수만큼 휴식 보장
	혹서기 및 혹한기 선수보호 규정 마련
	합숙소 전면 폐지 및 제한적 기숙사운영
	학부모 비공식 비용 각출 금지
	학교운동부 지도자 부당한 진학 개입 금지
	학교운동부 운영비 공개 및 투명성 확보
	학교운동부 지도자 인권교육 강화
	학교운동부 운영 및 관리 규정 제정
4 지도자처우	스포츠문화 전수자로 역할 재설정
	학교운동부 지도자 고용불안정 문제 개선
	스포츠클럽과 학교운동부 통합대회 추진
5 일반학생 스포츠참여 활성화	통합대회 위한 선수등록제도 개선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참가 결과공개
	학교스포츠클럽 운영예산 및 인력 지원
	학교스포츠클럽 특성화 프로그램 개발
	학교스포츠클럽 경기이력시스템 개발
	학교스포츠클럽 전담교사 수당 현실화
	다양한 스포츠 프로그램 제공
6 전국스포츠대회 운영	전국소년체육대회를 통합학생스포츠축전으로 개편
	통합학생스포츠축전은 중·고등부 참가
	초등부는 권역별 학생스포츠축전으로 전환

구체적 내용 중 학생선수의 학기 중 주중 대회 참가 금지는 가장 많은 논란을 낳았던 권고사항이다. 하지만, 통계를 살펴보면, ‘2019년 기준 학기 중 주중 개최 대회는 전체 대회의 38%’에 이르며, ‘주당 평균 훈련시간 역시 초등 22시간, 중등 26시간 50분, 고등 24시간 50분’으로 해외 선진국과 비교해 턱없이 많으며, 수업일수의 1/3까지 대회 및 훈련 참가 시 결석으로 인정하지 않는 제도도 수업결손을 부추긴다(문화체육관광부, 2020).

둘째, 체육특기자 진학은 입시에서 불투명한 경기 실적 위주의 선발로 인해 각종 부조리를 양산한다. 따라서, ‘기존 경기실적 중심의 체육특기자 진학제도를 경기력, 내신 성적, 출결, 면접 등이 반영된 종합적 선발시스템으로 전환(문화체육관광부, 2019)’할 것을 권고했다.

셋째, 학교운동부는 국가주의와 성적 지상주의를 떠받치는 하위 기제로 운영되어 오면서 자율적 교육활동단위로서의 위상과 성격을 상실하고 학습권 박탈 및 폭력, 성폭력 등 인권침해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따라서, ‘합숙소 폐지 등 학교운동부에 대한 체계적 관리(문화체육관광부, 2019)’를 권고했다.

넷째,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부정부패에 대한 일벌 백계만으로는 생계형 이탈을 막기가 어려우므로 정부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역할 재정립 및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문화체육관광부, 2019)’을 권고했다.

다섯째, 99%의 일반 학생은 운동결핍에 놓여있다. 따라서 학생들이 평생 운동습관을 갖고 ‘스포츠리터러시’를 기를 수 있도록 학교스포츠클럽 정책의 목표를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문화체육관광부, 2019).

여섯째, 현재의 전국스포츠대회 운영방식은 과도한 경쟁을 부추기면서 폐해가 발생하고 있다. 향후일반 학생의 참여유도 확대 등 교육의 장으로 개편할 것을 권고했다(문화체육관광부, 2019).

### 3) 권고의미

2차 권고의 주요의미는 학교스포츠의 비정상성을 구조적 문제로 규정하고, ‘운동결핍인 99%의 일반학생과 공부결핍인 1%의 학생선수의 벽을 허물려는 제도

적 장치를 마련(문화체육관광부, 2019)’했다는 점이다. 학생들은 ‘공부만’하거나 ‘운동만’하는 기계가 아니며 초·중·고등학교 시절은 한 인간으로서 성장하는데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문화체육관광부, 2020).

학생선수의 학습권을 체계적으로 국가가 나서서 박탈해 온 기존 엘리트 선수 육성시스템은 헌법적 관점에서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국가는 기존에 학교운동부에 소속되어 구조적으로 공부에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학생선수들이 ‘부상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중도에 탈락하더라도 일반학생과 다름없이 자신의 미래에 대한 이중 경력(dual career)를 선택(문화체육관광부, 2019)’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한편, 일반 학생들은 스포츠리터러시를 적극적으로 기를 수 있어야 한다. 스포츠리터러시는 ‘몸에 대한 자기 통제력을 습득하고 일생동안 다양한 형태의 스포츠를 만나 몸으로 해석하며 일상에서 반복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능력(문화체육관광부, 2019)’을 의미한다. 즉, 국가는 모든 학생들이 어릴 적부터 스포츠와 신체활동 참여를 습관화하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주어야 하며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들을 권고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4. 생활스포츠 활성화(3-5차 권고)

### 1) 권고배경

3차 권고는 ‘모두를 위한 스포츠’이다. 이를 위해서는 엘리트 위주의 독점구조에서 엘리트, 학교, 생활스포츠가 균형적으로 발전하고 공존하는 가운데 ‘모든 사람의 스포츠 참여 및 향유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구축(문화체육관광부, 2019)’되어야 한다.

4차 권고는 ‘스포츠기본법’ 제정이다. 1962년에 제정되어 27회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은 스포츠의 가치와 지향점 설정의 한계가 있다. 따라서 ‘스포츠권’을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보장할 국가의 책무 등을 명시한 새로운 법·제도의 구축이 필요하므로 권고하게 되었다(문화체육관광부, 2019).

5차 권고는 ‘스포츠클럽 활성화’이다. 생활스포츠의 저변확대 및 엘리트 스포츠의 새로운 활로 개척을 위

해서는 ‘계층과 지역에 상관없이 언제 어디서나 일상에서 스포츠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모든 사람은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일생 동안 스포츠 및 신체 활동의 연속성을 확보’해야 한다(문화체육관광부, 2019). 이런 점에서 스포츠클럽의 활성화는 매우 중요하다.

**2) 핵심내용**

3-5차 권고의 핵심내용은 <표 5>와 같다.

‘모두를 위한 스포츠’ 권고(3차) 중 핵심내용은 여성과 장애인이다. 스포츠 분야의 성 평등과 장애 평등을 위해 실태연구 및 다양한 스포츠 프로그램 제공, 시설, 지도자 양성 등 한 다양한 정책들을 권고했다. 장기적으로는 스포츠 인권침해 예방정책의 수립 및 실행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스포츠 인권 가이드라인의 혁신적 재구성 및 효과적 이행방안 마련, 체계적·정례적 스포츠 인권 실태연구 및 정책대안 제시, 실효성있는 스포츠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제도화(문화체육관광부, 2019)’를 권고했다.

스포츠기본법 권고(4차)의 핵심내용은 모두를 위한 스포츠파러다임을 담아낼 수 있는 체육관련 법령의 모범 형태로 새로운 법을 제정하는 것이다. 또한,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가칭)를 통해 국가 스포츠 정책수립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문화체육관광부, 2019).

스포츠클럽 활성화(5차)의 핵심내용은 스포츠클럽

의 제도화를 통해 생활스포츠와 엘리트스포츠를 연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스포츠클럽 등록제를 도입하고 종목별, 수준별 스포츠클럽 대회 개최를 지원하며, 예산 및 행정적 지원과 스포츠클럽 지원법을 제정하는 것이다(문화체육관광부, 2019).

**3) 권고의미**

3차 권고의 주요의미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이어진 국가 주도의 엘리트스포츠 패러다임을 대체할 ‘모두를 위한 스포츠’ 패러다임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제시했다는 점이다. 또한,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여성, 장애인을 위한 스포츠 정책의 필요성을 권고한 점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문화체육관광부, 2020).

4차 권고의 주요의미는 보편적 기본권으로서 ‘스포츠권’의 개념을 명확히 정립하고, 이에 따른 스포츠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루기 위해 기존 체육 관계 법령의 개정 수준을 넘어선 별도의 입법 조치인 스포츠키본법을 권고했다는 점이다(문화체육관광부, 2020).

5차 권고의 주요의미는 고령화와 1인 가구 비율의 급증과 같은 사회 변화 속에서, 지역 공동체의 사회관계망 형성 및 발전에 기여하는 매개체로서 스포츠클럽의 역할을 강조했다라는 점이다. 이는 생활스포츠의 저변확대와 엘리트 스포츠의 활로 개척, 스포츠 복지사회 구현을 위해서도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문화체육관광부, 2020).

표 5. 혁신위 3-5차 권고 상세내용

분야	내용
3차 모두를 위한 스포츠	모두의 스포츠 향유권을 위한 전략수립
	아동·청소년 신체활동 참여 프로그램 확대
	다양한 인구 집단 신체활동 참여기회 확대
	스포츠 분야 인권 예방 정책 및 제도 마련
	성인지적 관점의 스포츠정책 수립
	스포츠 성 평등 실태 조사 및 교육
	여학생 신체활동 제약요인 개선
	여학생 신체활동 참여 및 편의시설 확대
	여성 스포츠 지도자 비율 확대
	남성 중심적 스포츠 조직 문화 혁신

	스포츠 분야 장애평등 정책 수립
	스포츠 분야 장애차별 실태 조사 및 교육
	장애학생 신체활동 제약요인 개선
	장애인 스포츠 시설 및 프로그램 확대
	장애인 체육지도자 양성 확대
	스포츠 분야 장애인 임원 비율 확대
	실질적 스포츠인권 가이드라인 마련
	체계적 스포츠 인권 실태연구 및 정책대안
	실질적 스포츠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4차 스포츠 기본법	모든 사람의 신체활동 참여 권리 보장
	스포츠를 통한 행복 및 공동체발전 기여
	신체활동의 자율성, 다양성, 민주성 보장
	헌법 10, 11, 12, 15, 31, 32, 34, 36조 근거
	모두의 스포츠 위한 국가 정책수립 근거
	스포츠정책위원회(가칭)의 설치 근거
	체육관계 법령을 총괄하는 모법 형태 제정
	스포츠 동호회의 지자체 등록을 통한 관리
	시설, 지도자, 프로그램, 대회참가 등 지원
	종목별·수준별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5차 스포츠클럽	회원과 지자체 공동 예산 운영
	중장기 스포츠클럽 5개년 계획마련
	스포츠클럽과 학교운동부 연계
	스포츠클럽 대상 순환코치 제도 운영
	스포츠클럽 육성법 제정
	지자체의 스포츠클럽 조례 제정
	스포츠클럽의 공공체육시설 사용 지원
	학교체육시설 사용·위탁운영
	스포츠 시설 확충 및 지원 플랫폼 구축

**5. 엘리트스포츠 개선(6-7차 권고)**

**1) 권고배경**

엘리트스포츠 시스템 개선(6차)과 체육 단체 선진화를 위한 구조개편(7차)은 3분과에서 작성했다. 6차 권고의 배경은 ‘권위주의 정부 시절부터 운영되어 오던 엘리트 스포츠의 선수 육성체계, 진천선수촌, 연금, 병역 등 각종 제도나 정책이 한계에 직면(문화체육관광부, 2019)’했기 때문이다

한편, 7차 권고의 배경은 첫째, ‘대한체육회가 대한

올림픽위원회를 산하 기구로 두고 있으면서 과도한 엘리트 스포츠 지향 및 올림픽 경기력 중심의 정책과 사업추진의 핵심 기제로 작동(문화체육관광부, 2019)’했기 때문이다. 대한체육회는 그동안 ‘국가올림픽위원회로서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이유로 정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의 책무인 투명성, 합리성, 공공성을 회피(문화체육관광부, 2019)’ 해왔다. 결국, 대한체육회는 스포츠 분야의 빈번한 인권침해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소극적이었다. 따라서 혁신위는 대한체육회의 역할이 ‘모두를 위한 스포츠’ 패러다임으로 재정립되기

위해서 대한체육회와 대한올림픽위원회의 분리가 필수적이라고 판단했다(문화체육관광부, 2019).

## 2) 핵심내용

6-7차 권고의 핵심내용은 <표 6>과 같다.

표 6. 혁신위 6-7차 권고 상세내용

분야	내용
6차 엘리트 스포츠 시스템 개선	국가대표 훈련관리지침 등 규정 개선
	취약한 인권상담 및 조사기능 강화
	국가대표 학생선수 학습권 실태조사
	국가대표 학습지원 센터 설립
	국가대표지도자 처우개선 및 평가합리화
	진천선수촌 스포츠과학지원시스템 강화
	경기력향상연구연금 제도 개편
	체육요원제도 운영 강화
7차 체육단체 선진화 구조개편	스포츠과학 접목한 선수육성체계 선진화
	대한올림픽위원회와 대한체육회의 분리
	체육단체구조개편위원회 구성
	대한올림픽위원회는 국가대표 선수단 파견, 대회유치, 국제스포츠 담당
	대한체육회는 생활스포츠를 포괄하는 대표단체로 ‘모두를 위한 스포츠’ 정책 추진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6차 권고는 크게 엘리트스포츠 시스템 개선과 선수육성체계 선진화 2가지이다. 첫째, 엘리트스포츠 시스템 개선은 ‘진천선수촌 개선, 경기력향상연구연금제도 개편, 체육요원제도 개편(문화체육관광부, 2019)’이다. 둘째, 선수육성체계 선진화는 ‘선수등록제도 개편, 생활-엘리트스포츠대회 개편, 국가대표 하위육성체계 개편(문화체육관광부, 2019)’이다.

7차 권고의 핵심내용은 ‘2021년 상반기까지 대한올림픽위원회와 대한체육회를 분리하고, 분리 이후, 대한올림픽위원회는 올림픽 등 세계스포츠 대회 대표 선수단 파견 및 대회 유치, 국제스포츠 경쟁력 강화 노력, 국제스포츠 외교 증진 등에 관한 사업을 담당하는 것(문화체육관광부, 2019)’이다. 또한, 대한체육회는 ‘모든 사람을 위한 스포츠 정책구현을 위한 각종

사업, 서비스, 프로그램 등의 실행 기구로 개편하는 것(문화체육관광부, 2019)’이다. 한편, 이를 위해 필요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과 법 개정 이후 조직, 인력, 자원배분, 회원종목 단체와의 관계 등 논의를 위한 ‘체육단체구조개편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권고했다(문화체육관광부, 2019).

## 3) 권고의미

6차 권고의 주요의미는 진천선수촌의 인권 친화적 개선정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과학적인 훈련방식을 권고했다는 점이다(문화체육관광부, 2020). 태릉선수촌과 진천선수촌은 선수들이 훈련에 필요한 환경을 제공하여 집중적으로 경기력을 높이는데 기여한 반면, 엘리트스포츠의 중심 거점으로 올림픽 출전선수 육성에만 지나치게 치중하여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폭력과 성폭력, 학습권 침해 등 인권적 문제는 간과해 왔다. 또한, 연금과 병역 혜택도 수십 년간 국가의 ‘메달 지상주의’ 정책을 떠받들어온 상징적인 기제였다는 점에서 이를 개편하는 권고를 낸 것은 의미 있다고 판단된다.

7차 권고의 주요의미는 대한체육회가 연간 수천억의 예산 대부분을 정부와 공공기금을 통해 지원받고 있는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스포츠 분야에서 발생한 중대한 인권침해와 각종 비리 및 부조리 등에 대해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지 못함을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한체육회와 대한올림픽위원회의 통합을 권고했다는 데 있다(문화체육관광부, 2020).

## 스포츠혁신과 변화

1-7차에 이르는 권고문 발표 후 혁신위는 2019년 하반기부터 기존 3분과 체제를 2점검단 체제로 변경하여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를 점검하였다. 점검단 회의는 총 17회(1점검단 8회, 2점검단 9회) 개최되었으며 총 52개의 권고 이행과제를 점검하였다. 점검단 구성현황은 <표 7>과 같다. 한편, 하반기 전원위원회 회의는 2019년 9월부터 2020년 1월까지 한 달에

한 번씩 총 6회 개최되었으며, 각 점검단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심의 의결하는 역할을 하였다(문화체육관광부, 2020).

표 7. 혁신위 점검단별 명단

이름	점검단	점검내용
문경란	전체	총괄
이용수	1 단장	
정윤수	1 점검단	1차 권고 이행과제(1개)
김화복		3차 권고 이행과제(1개)
서현수		4차 권고 이행과제(1개)
원민경		6차 권고 이행과제(8개)
배복주		7차 권고 이행과제(1개)
이영표		
류태호		2 단장
이대택	2 점검단	2차 권고 이행과제(33개)
이용식		5차 권고 이행과제(7개)
정용철		
홍덕기		
함은주		
서정화		

1점검단은 권고 세부 이행과제의 개수가 많지 않은 생활스포츠, 엘리트스포츠, 스포츠인권 관련 주제를 하나로 묶어서 과제 내용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위원들로 1, 2, 3, 4, 6, 7차 권고의 이행과제(총 11개)를 점검하였다. 한편, 2점검단은 권고의 비중이 높고, 세부 권고 이행과제 수가 많은 학교스포츠와 스포츠클럽에 전문성을 갖춘 위원들로 2, 5차 권고의 이행과제(총 40개)를 점검하였다. 1점검단과 2점검단 회의에는 문화체육관광부의 혁신위 TF팀과 교육부의 학교체육담당 과장 및 연구관이 참석하였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는 혁신위의 권고 이행을 위한 계획 수립 단계부터 선수, 지도자, 종목단체 등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실행 과정에서도 현장과의 소통을 지속하였다(문화체육관광부, 2020).

### 1. 1점검단 이행현황

1점검단의 이행과제는 총 12개이다. 각 이행과제는 진행 상황에 따라 정상추진과제(4개), 시행예정과제(6개), 지연추진과제(2개)로 구분했다(문화체육관광부, 2020).

#### 1) 정상추진 과제

1점검단의 정상추진 과제는 총 4개이다. 첫째, ‘모두를 위한 스포츠(3차 권고)’이다. 이 중 스포츠 성평등 정책의 경우 위원장을 포함한 스포츠 성평등에 전문성을 갖춘 위원 6명이 스포츠 성인지 TF를 구성하여 총 4회 회의를 개최하였고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교육부의 여성 건강 및 스포츠 정책 담당자가 회의에 참석하였다. 회의결과, 교육부는 ‘성평등 체육교육 전략수립, 전체 중·고등학교 탈의실 설치, 여학생 특화 신체 활동 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향후 특정 성별 영향평가 시 스포츠 분야 성평등 기준 마련, 양성평등기본계획 수립 시 스포츠 여성건강정책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는 ‘스포츠 분야 성평등 기본계획 수립할 예정’이다(문화체육관광부, 2020).

둘째, ‘스포츠기본법 제정(4차 권고)’이다. 현재, 스포츠기본법 제정을 위한 기초연구를 시작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과거 발의되거나 연구된 법안 및 혁신위 4차 권고문을 검토하여 ‘스포츠’ 및 ‘스포츠권’ 개념을 정립하고 스포츠기본법 제정의 기본원칙과 체계 및 필수적인 내용을 준비해 차기 국회에서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문화체육관광부, 2020).

셋째, ‘연금 개편(6차 권고)’이다. 향후 연금 대상자는 포상금의 성격에 맞도록 ‘전문가, 체육단체 등 현장의 충분한 의견 수렴 및 공론화 과정을 통해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하여 2021년부터 2028년까지 점진적으로 비율을 조정해서 일시금으로 전환할 예정’이다(문화체육관광부, 2020).

넷째, ‘생활스포츠와 엘리트스포츠 대회 개편(6차 권고)’이다. 이를 위해 ‘생활 및 엘리트 체육대회의 실질적 연계를 위한 종목별 수준대회, 오픈대회 등 개최 확대를 논의’하고 있다. 또한, 전국소년체육대회 등 전국대회 개편과 관련해서 체육계의 경기력 저하

및 전문체육 위축 등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논리적 설득을 진행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관련 당사자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개편과 관련한 구체적 논의를 지속할 계획이다(문화체육관광부, 2020).

## 2) 시행예정 과제

1점검단의 시행예정과제는 총 6개이다. 첫째, ‘스포츠윤리센터 신설(1차 권고)’이다. 현재 추진현황은 스포츠윤리센터의 설립 근거인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은 2019년 11월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고, 2020년 1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였다. 이 개정안은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스포츠윤리센터를 독립된 법인으로 설립하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폭력 및 성폭력 등 인권침해 예방조치 및 가해자 제재 강화에 관한 사항과 피해자 구제 등 체육인 보호 시책’을 종합적으로 담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2020년 스포츠윤리센터의 설립 및 운영예산으로 22.9억을 이미 확보해놓은 상황이다(문화체육관광부, 2020).

둘째, ‘진천선수촌 인권보장 강화(6차 권고)’이다. 추진현황은 대한체육회와 문화체육관광부 담당자가 5차례 회의를 개최하였고 선수촌 관련 규정에 ‘인권보장’을 명문화하며 ‘지나친 위계서열 문화 및 관련 용어를 개정(예: 국가대표 선수 지도자 복종 규정 삭제 등)하기로 합의한 상황이다. 향후 2020년 1분기 대한체육회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관련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문화체육관광부, 2020).

진천선수촌의 인권상담실은 ‘국민권익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 담당자가 2차례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2020년 상반기 중 상담 인력을 추가 채용하는 등 운영을 개선할 계획’이다. 한편, 국가대표 학생선수의 학습권을 위한 학습지원센터와 관련해서는 ‘학사관리 지원, 보충 교육, 프로그램 구성, 국가대표 학생선수 학습권 실태조사 등 구체적 실행계획이 마련된 상황’이며 학습지원센터 설치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2020년 상반기 중 운영할 계획이다(문화체육관광부, 2020).

셋째, ‘국가대표 지도자 처우개선(6차 권고)’이다. 현재 추진현황은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을 확보(20억)

해 놓은 상황이고 1년 미만의 계약 기간을 2년으로 늘리고 기존 15일 이상 훈련 시 월 550만원 지급하던 것을 훈련일수 상관없이 지급할 예정’이다(문화체육관광부, 2020).

넷째, ‘진천선수촌 스포츠과학 지원강화(6차 권고)’이다. 추진현황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대한체육회가 공동 협의를 거쳐 스포츠과학 지원 기능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국가대표 밀착지원 예산(30억)을 확보해놓은 상황이다. 향후 계획은 스포츠정책과학원의 전문 인력과 예산을 보강하고, 스포츠과학 지원체계에 대한 중장기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문화체육관광부, 2020).

다섯째, ‘체육요원제도 개편(6차 권고)’이다. 추진현황은 국방부와 병무청 TF를 통해 예술·체육요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마련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관계기관 협의와 행정예고, 규제심사 등을 거쳐 개정이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령 개정의 핵심은 관리·감독의 강화로 경고처분 시 봉사활동 시간을 2배로 연장하는 등 처벌규정을 강화하고, 복무요원 편입대상을 현재 실제 출전선수에서 최종 선수명단에 등록된 선수로 변경할 예정이다(문화체육관광부, 2020).

여섯째, ‘국가대표 하위육성 체계 개편(6차 권고)’이다. 추진현황은 관계기관 회의를 3차례 개최한 후, 현재의 하위육성 체계 4단계를 3단계로 바꾸고 과학 지원을 모든 단계로 확대하는 등 개선안을 마련하였다. 또한, 이를 위한 추가 예산(10억)을 확보하였으며 하위육성 체계 개선 계획을 2020년 상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문화체육관광부, 2020).

## 3) 지연추진 과제

1점검단의 지연추진 과제는 총 2개이다. 첫째, ‘선수등록제도 개편(6차 권고)’이다. 경기인 등록규정 개정의 지연 사유는 대한체육회가 관련 규정을 2019년 1월 31일 전면 개정하였으므로 연내 재개정이 어렵다는 이유였다. 다만, 대한체육회도 선수등록제도 개편의 취지에 동의하고 있으므로 올해 상반기부터 대한체육회와 협의를 지속할 예정이다(문화체육관광부, 2020).

둘째, ‘대한체육회와 대한올림픽위원회의 분리(7차 권고)’이다. 지연 내용은 체육 단체 분리계획 수립 및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마련이다. 지연 사유는 2019년 국회 일정의 파행 속에서 법안이 미 발의된 상황이다. 현재 국회 회기가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차기 국회에서 발의할 계획이다(문화체육관광부, 2020).

## 2. 2점검단 이행현황

2점검단의 권고 이행점검과제는 총 40개이다. 각 이행과제는 진행 상황에 따라 정상추진과제(17개), 시행예정과제(19개), 지연추진과제(4개)로 구분했다(문화체육관광부, 2020).

### 1) 정상추진 과제

2점검단의 정상추진 과제는 총 17개이며 <표 8>과 같다. 이 중, 학교 스포츠클럽과 관련한 내용은 총 5개이며 교육부가 2020 학교체육 활성화추진 기본계획에 반영하였다. 또한, 학습권 및 지도자 고용불안정 등 처우개선, 선수등록제도 개선과 관련된 내용도 교육부가 의견을 수렴하여 정상추진 중이다(문화체육관광부, 2020).

구체적으로 학교운동부 종목별 통합대회와 관련하여 2019년 12월 초등학교 5학년 엘리트 핸드볼 20팀과 클럽 20팀이 함께 꿈나무 핸드볼 페스티벌이 개최되어 그 가능성을 확인했으며 다른 종목으로 확대 진행 예정이다(문화체육관광부, 2020).

입학전형과 관련한 내용은 총 5개이며 교육부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시도교육청, 학교체육진흥회와 협의를 하는 중이다. 또한, 스포츠클럽과 관련된 내용은 총 4개이며,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에서 혁신위 권고안 실행을 위한 기초 작업을 진행 중이다(문화체육관광부, 2020).

### 2) 시행예정 과제

2점검단의 시행예정과제는 총 19개이며 <표 9>와 같다(문화체육관광부, 2020). 이 중 가장 핵심적인 과제는 ‘초·중·고 학기 중 주중 대회의 주말 대회 전환’이다. 2019년 대한체육회 산하 56개 회원종목단체가 개최하고 있는 ‘초·중·고등학생 대상 학기 중 주중 대회 수는 총 598개(초등 134개, 중등 223개, 고

표 8. 2점검단 정상추진 과제(17개)

분야	내용
2차 학교 스포츠 정상화 (13개)	경력전환 학생선수 학습지원 프로그램마련
	국가대표 학생선수 학습방안 마련
	고입전형 시 종합적 선발기준 마련
	고입전형 시 내신 성적의 실질반영
	체육특기자 진학 가이드라인 마련
	대입전형 시 각 전형요소별 종합반영
	대입전형 시 종목별 경기력 평가지표 개발
	지도자 고용불안정 등 처우 개선
	스포츠클럽과 학교운동부 종목별 통합대회
	선수등록제도 개선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등 프로그램 개발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기록 및 진로에 활용
	전국소년체육대회를 통합학생스포츠축전으로 개편
5차 스포츠클럽 활성화 (4개)	스포츠클럽 등록제 운영
	스포츠클럽 대회 및 예산일부 지원
	스포츠클럽 육성계획 수립
	스포츠클럽 법제화

등 241개로 전체 1,171개 대회의 51%)이다(문화체육관광부, 2020).

추진 경과는 대한체육회와 회원종목단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10여 차례 진행하였고 1차 전환계획을 제출받았다. 이를 바탕으로 혁신위, 한국스포츠정책과 학원, 현장 전문가 등이 전문가 검토 회의를 8차례 실시하였다. 이후, 문화체육관광부 학교체육 담당자와 혁신위 2점검단 위원들이 공동으로 65개 회원종목단체와 개별협의를 진행한 후 회원종목단체로부터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단계별로 2차 전환계획을 제출받은 상황이다(문화체육관광부, 2020).

향후 계획은 2020년 44개 대회, 2021년 85개 대회, 2022년 110개 대회가 주말 대회로 전환될 예정이다. 다만, ‘대입시 현재의 경기력 반영 비율과 시설, 예산, 인력 등의 문제’로 인해 현재 시점에서 주말 대회 전환 계획은 혁신위 권고 목표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표 9. 2점검단 시행예정과제(19개)

분야	내용
2차 학교 스포츠 정상화 (16개)	학기 중 주중대회 참가금지
	학교단위 학생선수 교육 및 훈련계획 수립
	학기 중 주중대회를 주말대회로 전환
	학기 중 주말대회 전환에 따른 재정지원
	정규 수업 이수 후 훈련 실시 및 휴식마련
	주말대회 참여시 참여일수만큼 휴식 보장
	혹서기 및 혹한기 선수보호규정 마련
	합숙소 전면 폐지 및 제한적 기숙사운영
	학부모 비공식 비용 각출 금지
	학교운동부 지도자 부당한 진학 개입 금지
	학교운동부 운영비 공개 및 투명성 확보
	학교운동부 지도자 인권교육 강화
	학교운동부 운영 및 관리 규정 제정
5차 스포츠 클럽 활성화 (3개)	스포츠문화 전수자로 역할 재설정
	학교스포츠클럽 교내·외 리그 개최지원
	학교스포츠클럽 외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다(문화체육관광부, 2020). 따라서 주말 대회 확대 지원계획으로 예산지원, 시설지원, 사무국 행정역량 강화지원, 홍보, 포상, 평가 등을 실시할 계획이며 장기적으로는 대회 수를 적정화할 계획이다. 주말대회 운영을 위한 재정지원은 향후 학기 중 주중대회의 주말 전환에 따른 효과, 비용, 방법, 종목별 필요 시설 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와 2021년 대회 전환 계획을 감안하여 예산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문화체육관광부, 2020).

한편, 스포츠클럽과 관련해서는 공공스포츠클럽을 통해 전문선수 육성으로 엘리트스포츠와 생활스포츠 간 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2020년 학교 연계형 공공스포츠클럽 신규예산(50.4억)을 확보하고, 기존의 공공스포츠클럽 전문 선수반 육성 지원예산을 기존 30억에서 51.74억으로 확

대할 예정이다. 스포츠클럽 시설 사용의 경우, 생활 SOC 3개년 계획 및 생활 SOC 복합화 사업을 통해 공공체육 인프라의 확대를 추진하고 스포츠클럽의 공공시설 및 학교 시설의 활용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스포츠클럽육성(지원)법 제정안에 스포츠클럽의 공공체육시설 우선 사용과 학교체육시설 사용에 대한 근거 조항을 마련할 계획이다. 플랫폼과 관련해서는 공공스포츠클럽의 홈페이지를 구축(www.sportsclub.sports.or.kr)한 상황이며 향후 스포츠클럽 등록제도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며 스포츠클럽의 등록 신청, 심사, 승인 등 행정지원 시스템을 구축해서 추진할 예정이다(문화체육관광부, 2020).

교육부와 관련한 시행예정과제는 총 11개로 주로 학교운동부 운영과 관련한 내용이다. 이 중 가장 핵심과제인 학기 중 주중대회 참가 금지의 경우 시도교육청 학교체육 담당자를 대상으로 여러 차례 정책실무협의회를 거친 상황이며 향후 계획은 이해당사자의 의견 수렴 결과를 반영하여 현재 대회 및 훈련 참가로 인한 1/3(63일) 출석인정제도를 '2020년부터 초등학교 20일, 중학교, 30일, 고등학교 40일로 줄이고 단계적으로 개선해나갈 계획'이다(문화체육관광부, 2020).

또한, 다른 과제들의 경우,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2차례, 체육 교사 1차례, 학교체육진흥중앙위원회 1차례, 시도교육청 학교운동부 담당자 2차례에 걸쳐 시행하고 시도교육청 정책실무협의회를 개최한 상황이다. 향후 계획은 2020년 학교체육 활성화 추진 기본계획에 혁신위 권고내용을 담고 이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진행할 예정이다(문화체육관광부, 2020).

### 3) 지연추진 과제

2점검단의 지연추진 과제는 총 4개이다.

첫째, '최저학력도달 학생만 대회참가 허용(2차 권고)'이다. 지연 사유는 '국회 일정차질에 따른 법안심사의 지연'이다. 교육부가 2019년 12월 말 시도교육청과 정책실무협의회를 실시한 상황으로 국회 법안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2020 학교체육 활성화 추진 기본계획'에 반영예정이다(문화체육관광부, 2020).

둘째, '최저학력 기준 미달 선수는 체육특기자 선발에서 제외(2차 권고)'이다. 지연 내용은 시도별 권고

문 이행계획 수립이며 지연 사유는 ‘고입전형과 관련한 사항은 시도교육감의 자율 권한으로 강제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향후 계획은 시도교육청과 정책실 무협의회를 실시한 후 의견을 수렴하는 설문을 조사할 예정이다(문화체육관광부, 2020).

셋째, 학교스포츠클럽활동 참가학생비율목표 설정 및 결과 공표(2차 권고)이다. 지연사유는 ‘시도교육청별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기 때문이다. 시도교육청은 강제사항보다는 권고사항으로 설정하여 시도교육청 별로 자발적으로 시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향후 계획은 이를 권고내용으로 ‘2020 학교체육 활성화 추진 기본계획’에 반영예정이다(문화체육관광부, 2020).

넷째, ‘학교스포츠클럽 담당 전담교사 수당 현실화(2차 권고)이다. 지연 사유는 ‘시도교육청별로 의견이 다양하며 타 교과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다. 향후 계획은 시도교육청과 정책실무협의회를 통해 협의를 지속해나갈 예정이다(문화체육관광부, 2020).

## 스포츠패러다임의 방향 설정과 과제

지금까지 2019년 한 해 동안 한국사회 스포츠 분야의 가장 큰 이슈였던 스포츠혁신위원회의 활동을 소개하고 각 권고문의 권고 배경과 핵심내용, 권고의미를 구체적으로 탐색하며, 권고 세부과제별 이행상황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장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스포츠혁신을 통한 한국사회 스포츠패러다임의 새로운 방향과 과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왜 이 시점에서 한국사회에 새로운 스포츠패러다임이 필요한지는 기존의 스포츠패러다임이 가져온 여러 병폐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 즉, 국위선양을 위한 과도한 승리지상주의 스포츠패러다임에 따른 스포츠 분야의 인권침해 실태는 기존의 정책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허헌미, 2011). 이전 정부에서도 ‘범정부 스포츠혁신 특별 전담팀’ 출범, ‘스포츠 4대 악 근절을 위한 문화체육관광부와 검찰 합동수사반’ 발족, ‘스포츠 3.0위원회’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민솔희, 조재훈, 2020). 하지만, 이러한 노력은 근시안적인 대책에 머물러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끌어내기에는 한계를 보였다. 따라서 혁신위는 출범 이후 성폭력 등 한국사회 스포츠 분야에서 벌어지는 반인권적이고 비교육적인 사건이 개인의 일탈이 아닌 체육계 전반의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분석과 새로운 스포츠패러다임 속에서 변화가 가능하다는 판단에 근거하여, 대한민국이 스포츠 선진국으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7차에 걸친 권고문을 발표하고 대한민국 정부에 혁신안을 주문하였다(문화체육관광부, 2019).

요약하면, 혁신위 권고의 일관된 방향은 대한민국 스포츠가 엘리트 체육 중심의 과도한 성적 지상주의에서 탈피하여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의 선순환을 이루고, ‘모두를 위한 스포츠’를 실현하는 스포츠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다. 이는 스포츠선진국으로 불리는 여러 나라들이 추구하는 세계적 추세이다. 또한, IOC 올림픽 헌장 제 4조는 “스포츠 활동은 인간의 권리이다. 모든 인간은 차별없이 올림픽 정신 안에서 스포츠 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새로운 스포츠패러다임의 방향을 설정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혁신위가 발표한 7개의 권고문은 많은 국민의 지지를 받기도 했지만, 한편에서는 현장의 목소리에 소홀했다는 비판과 함께 적지 않은 논란도 낳았다. 예를 들어, 가장 논란이 많았던 2차 권고의 경우, 대한체육회를 중심으로 한 현장의 엘리트 스포츠 인들은 2차 권고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엘리트 스포츠의 위축을 가장 우려하고 있었다(김세훈, 2019). 한편, 이에 대응해 전국 체육계열 스포츠 관련학과 교수 192명은 국가 스포츠패러다임의 혁신과 체육개혁을 촉구하고 혁신위를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KBS, 2019.7.2). 이어서 전국의 체육교사 354명은 학교체육 활성화와 모두를 위한 스포츠, 스포츠 기본법 등을 담고 있는 혁신위의 권고를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하였다(KBS, 2019.7.19).

권고가 발표된 이후, 체육단체 등 이해 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었지만 분명한 점은 이들 역시 현재의 상태로는 문제가 있으며 구체적 방법은 다를 수 있지만 개혁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는 사실이다(김세훈, 2019; 최의창, 2020). 진천선수촌, 연금, 병역 특례 등 엘리트스포츠 시스템은 경기력 향상과 국제대회 우수 성적이라는 성과를 창출하기도 하였지만, ‘성적 지상주의’ 속에 벌어지는 수많은 인권침해와 각종 비리를 정당화하였고, 체육 단체의 비민주적 운영은 스포츠의 기본적 가치인 공공성을 훼손한 것이 사실이다.

‘모두를 위한 스포츠’ 패러다임 설정에 따른 이행과제는 총 52개이며, 이중 정상추진 과제는 21개, 시행예정 과제는 25개, 지연추진 과제는 6개이다(문화체육관광부, 2020). 이제는 ‘모두를 위한 스포츠’ 패러다임에 맞게 혁신위의 권고를 현장에서 잘 이행해야 할 시점이다. 권고의 이행과 관련하여 향후과제를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혁신위 권고문의 취지와 내용, 의미를 현장의 체육관계자들과 국민에게 잘 설명하고 홍보할 필요가 있다. 혁신위 권고문은 ‘모두를 위한 스포츠’라는 패러다임 속에 체육전반에 걸친 내용을 방대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세부분야에 있어서 보다 정교한 고찰을 통한 정책도출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민솔희, 조재훈(2020)은 혁신위 권고문이 장애인스포츠 분야에 적용될 경우 충돌가능성이 있거나 보완이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권고문을 재검토하고 이를 현장에 맞게 재구성하여 장애인스포츠 분야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위와 같이 장애인 스포츠뿐만 아니라, 여성 스포츠, 학교 스포츠, 생활 스포츠, 엘리트 스포츠 등 스포츠 전반의 각 분야별로 권고문의 내용이 현장에서 이해하기 쉽게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

둘째, 권고문이 현장에 반발을 사고 있는 부분은 현장의 의견을 더 수렴해서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장 간담회, 토론회, 공청회, 설문조사 등이 보다 긴밀히 이루어져야 한다(민솔희, 조재훈, 2020). 단, 현장의 의견수렴이라는 명분으로 새로운 스포츠파러다임에 대한 방향마저 흔들여 놓는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

셋째, 혁신위 활동이 끝난 후에도 정부의 스포츠 정책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모니터링과 적절한 감시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혁신위 권고안 중 학교 운동부 지도자 처우 개선 권고의 경우, 권고가 운동부 지도자의 전문성에 대한 개념을 확장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처우개선 그 자체만으로 그들의 전문성이 담보되지는 않으므로 새로운 역할에 맞는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운동부 지도자 재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임한열, 윤기준, 2019). 이는 비단 운동부 지도자 처우개선 권고뿐만 아니라 52개의 이행과제 모두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적절한 감시 없이는 불가능하다.

넷째, 체육학과와 시민사회 등이 학문적 경계를 넘어서 머리를 맞대고 적극적으로 이 사안을 논의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최근 한국체육의 개혁방향과 스포츠교육의 역할을 학문적으로 고찰한 최의창(2020)의 시도는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혁신위가 한국 스포츠 분야에 미친 파장이 적지 않음을 고려할 때, 권고의 배경과 핵심내용, 의미를 학문적으로 탐색하고, 새로운 스포츠파러다임의 방향 설정을 위한 과제를 모색했다는 점에 그 의미가 있다. 본 연구에서 밝힌 스포츠혁신을 향한 여정이 현장의 여건을 잘 고려한 가운데 한국사회에 새로운 스포츠파러다임으로 잘 정착되기를 바란다. 체육학문을 연구하고 보다 나은 스포츠의 미래를 꿈꾸는 한 체육학자의 입장에서 스포츠 분야에서 다시는 반인륜적인 사건들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그 마음으로 자라나는 미래 세대에게 스포츠를 물려줘야 하지 않을까.

“많은 분들 덕에 제가 더 용기를 내었고, 그동안 부정해오던 피해자로서의 저의 존재도 인정할 수 있었어요. 저는 이제 더 당당하게 세상 앞으로 나아가고 싶어요. 그런 제가 혹시 또 다른 피해자분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되어 드릴 수 있다면, 그분들도 용기를 내셔서 일어서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경향신문, 2019.12.30.)”

## 참고문헌

- 경향신문(2019.12.30.). 박주연의 색다른 인터뷰: 심석희 “폭로 뒤 고통 컸지만 후회 없어... 이제, 당당히 나아갈 거예요”
- 국가인권위원회(2008). **운동선수 인권상황 실태조사: 중·고교 학생선수들의 학습권, 폭력, 성폭력 실태를 중심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
- 국가인권위원회(2009). **“중도탈락”학생선수 인권상황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
- 김성하, 전원제, 임수연(2015). 엘리트 스포츠 내 성폭력 발생 기저와 경험체계 탐색. **한국체육학회지**, 54(6), 81-94.
- 김세훈(2019). ‘협력’과 ‘유연’으로 스포츠의 미래를 밝히다. 스포츠혁신위원회 권고안에 대한 고찰. 대한체육회 SPORTS1 7월호, 2-7.
- 류태호(2003). **학교체육 정책에 관한 제도개선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교육정책연구 2003-지정-08.
- 류태호(2005). 학원스포츠의 과제와 전망.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 12(2), 91-108.
- 류태호, 이주욱(2004). 운동선수의 학교생활과 문화. **한국체육학회지**, 43(4), 271-282.
- 명왕성, 조성원(2016). 학원 스포츠 과도기의 명과암: 최저학력제에 관한 문헌고찰. **한국사회체육학회지**, 64, 25-38.
- 문화체육관광부(2019). **대한민국 스포츠의 미래와 혁신방안 - 스포츠혁신위원회 권고문집**.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혁신위원회.
- 문화체육관광부(2020, 발간예정). **스포츠혁신위원회 활동백서**.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혁신위원회.
- 민솔희, 조재훈(2020). 스포츠혁신권고안의 함의와 장애인스포츠 분야 적용. **한국체육학회지**, 59(1), 339-353.
- 안민석, 홍덕기(2019). **스포츠인권백서: 언론보도를 통해 본 스포츠 반(反)인권 사례모음**. 국회의원 안민석 의원실 정책자료집.
- 윌클리오늘(2019.1.14.). 문재인 대통령 “체육계 성폭력, 스포츠 강국 속 부끄러운 모습”
- 이선희, 광정현(2019). 여성스포츠 선수의 성폭력에 방 및 대책에 대한 정책 제안. **한국체육과학회지**, 28, 123-132.
- 이정래(2003). 고등학교 중도탈락 운동선수의 학교생활 적응에 관한 질적 분석.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16(2), 513-529.
- 이학준(2003). 학생운동선수를 생각한다. **한국체육학회지**, 42(5), 61-69.
- 임수원(2011). 공부하는 학생선수 만들기의 논리적 근거. **한국체육학회지**, 50(2), 45-57.
- 임용석, 김준성, 한만석(2014). 중도탈락 학생선수의 경험을 통해 바라본 학업의 의미. **한국사회체육학회지**, 57(1), 91-104.
- 임한열, 윤기준(2019). 중학교 운동부 지도자의 인성교육 실천 양상 탐색.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 26(3), 73-88.
- 주종미(2008). 운동부내 성폭력 실태와 대응방안.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11(3), 219-245.
- 최의창(2020). 한국체육 개혁의 방향과 스포츠교육의 역할 -스포츠교육이 이끌어가는 한국체육 4.0을 지향하며-.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 27(1), 1-21.
- 허현미(2011). 엘리트 남녀선수의 성폭력 피해 실태와 인식에 관한 연구. **여성학논집**, 28(2), 75-107.
- 홍덕기, 류태호(2007). 인권으로 바라본 학생선수: 교육적 담론.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 14(4), 131-154.
- KBS(2019.7.2.). 체육학 교수들 “스포츠 혁신위 권고 안지지성명”...찬반 논쟁 가열.
- KBS(2019.7.19.). 체육교사들 “스포츠 혁신위 권고 안지지”.

논문투고일: 2020. 01. 27

논문심사일: 2020. 02. 03

심사완료일: 2020. 03. 16